

13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6035.35 (-348.89)	837.03 (-12.26)		
↓ 금리 (미국 9년)	↑ 환율 (원-달러)		
3.857 (-0.064)	1343.00 (+7.90)		

코스피 5%대 폭락... 6000선 간신히 지켰다

5.46% 하락한 6035.35 마감
시가총액 4980조로 쪼그라 들어
삼전 23만원, 하닉 144만원 마감
외인 4조5600억 어치 팔아치워
美 뉴욕·아시아 증시도 일제 하락

코스피가 13일 장중 6000선을 내주며 '검은 화요일'을 연출했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발 쇼크'와 인공지능(AI) 기업들의 자금 조달 우려에 불거지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5.46% 하락한 6035.35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5911.11까지 밀리기도 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4980조원으로 쪼그라 들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다. 코스피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올 8월 19일 이후 55일 만이다. 올해 매도 사이드카는 26번 발동됐고 매수와 매도 등 사이드카 전체는 50번째다.

〈관련기사 3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7.39% 하락한 23만20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10.09% 하락한 144만3000원을 기록했다. 4조5600억원 어치를 팔아치운 외국인 매도세 탓이다. 최근 국내 증시의 부진은 중국의 반도체 추격 이슈와 미국 국제금리 상승과 원화 강세에 따른 부담, 삼성전자 3분기 실적발표에 뒤따른 셀온(Sell-on·호재 속 가격하락) 등이 거론된다.

중국 최대 D램 업체인 CXMT의 기술



반도체 가격 급등 '칩플레이션' 우려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칩플레이션'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산에 따른 반도체 가격 급등의 영향이 점차 가계까지 미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하는 저장장치,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본격화할 조짐이다. 사진은 13일 서울의 한 전자상가에 진열된 컴퓨터 부품 모습. /뉴시스

혁신 소식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최근 CXMT는 연말까지 차세대 4F² 구조를 적용한 서버용 DDR5 메모리 모듈(RDIMM)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4F²는 D램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인 메모리 셀의 면적을 나타내는데, 이는 현재 널리 사용되는 6F² 구조보다 셀 면적이 이론적으로 약 33% 작다. 실제로 생산이 이뤄진다면 한 장의 웨이퍼로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CXMT의 과도한 기술 마케팅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중국의 연구개발(R&D) 능력이 빠르게 한국을 따라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경고음'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나 전력 부족이 아닌 자금 조달이 AI 붐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혹탄 브로드컴 최고경영자(CEO)의 경고 역시 배경으로 꼽힌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난 2년간 여러 차례 병목 현상이 발생했지만, 그때마다 극복해왔다. 지금의 메모리 부족도 1년 뒤에는 상황이 달라져 있을 수 있다"며 "최대 제약 요인은 자본일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채권 금리 상승 등 전 세계적 고금리 기조가 AI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투자를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시장의 우려에 전날 뉴욕증시에서 팔라

델피아 반도체지수도 2.67% 떨어졌다. 엔비디아(-1.3%), 마이크론(-3.9%), AMD(-2.3%)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아시아 증시도 무너졌다. 이날 니케이 225는 1.82% 하락했다. 홍콩, 중국 등 주요국 증시는 보합권을 오갔다. 차츰 유가도 끊임없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라이트 국제공황 가격 효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날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1.84% 오른 배럴당 106.6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외교·통일·국방·법무부 등 44곳 5년내 세종 간다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
행안부, 공무원 정원기준 9929명
27개 기관, 2995명 내년 중 이전

서울 소재의 외교부·통일부·국방부·성평등기조부·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경기 과천에 홀로 남아 있는 법무부까지 남김없이 세종으로 이전된다. 그간 수도권에 잔류하던 중앙부처와 기관 등 44곳이 향후 5년 내 세종특별자치시로 본거지를 옮기게 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대상 및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차 세종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중앙부처 5곳 포함)이다.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 도합 9929명 규모다. 앞서 완료된 1차 이전 43곳의 정원은 1만4731명이었다.

이전은 업무 특성 및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청사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신축 후 이전' 등 2가지 방식으로 추진한다. 우선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995명은 민간에서 빌린 임시청사를 활용해 내년 중 단계적으로 옮긴다.

이전 행렬의 선두에 서는 곳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곳이다. 2027년 상반기로 잡혔다.

이어 내년 하반기 금융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국가인공

지능전략위원회 등 각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곳이 이전하는 수준이다. 다만 내년 이전이 예고된 법무부와 성평등부의 경우, 구체적인 이전 시점은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정해진다. 현행 법이 법무부·성평등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를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사·보안·관계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나머지 17개 기관·6934명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중수청, 공소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등 형사사법기관 5곳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외교·안보 부처 3곳이다. 국사편찬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국방홍보원 등 청사 신축 및 부처와 연계된 소속기관 9곳도 이에 해당된다.

다만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 청와대 연계 기관의 이전은 2029년 준공 이후 대통령세종집무실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추후 별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대상 선정 기준 관련해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내년 임시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 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임시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 예산은 총 3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에 기본 설계비 286억 원을 반영해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韓 올해 성장률 3.3%
전망치 0.7%p 상향

우리나라가 주요국 가운데 이례적으로 고성장 국가반열에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한국의 성장률이 각각 3.3%, 2.8%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면서 경제규모 세계 20위권에 드는 나라들 중 독보적이다.

IMF는 13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종전(2.6%·7월 전망) 대비 0.7%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특히 세계경제 성장률에 앞설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3.0%에서 3.1%로 0.1%p 올랐다.

미국(2.3%)과 스페인(2.5%)을 제외하면 IMF가 비교한 선진국은 대개 1%대 이하나 1% 미만이었다. 일본 경제는 0.7%, 프랑스(0.4%)와 이탈리아(0.8%)도 0%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1.3%)과 독일(1.3%), 캐나다(1.1%)는 각각 1%대 초·중반을 예상했다.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는 1.9% 성장을 제시했다.

IMF, 3개월 만에 상향 조정
세계경제 전망 3.1%보다 앞서
내년 전망 2.8%, 0.3%p 올려

내년에도 마찬가지다. 이들 국가 중 한국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이란 관측이다.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예측치 역시 올려 잡았다. 종전의 2.5%에서 2.8%로 0.3%p 상향 조정했다. 또 내년에는 주요국 중 한국과 미국(2.3%)을 제외하고 모두 2% 미만으로 예상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해 "세계(0.1% 상향) 및 선진국 평균(0.4%p 상향) 상향 폭을 모두 상회하는 것은 한국의 강력한 AI 하드웨어·반도체 관련 수출 호조의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중동전쟁 장기화, 물가·금리의 상승으로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등 양극화 완화 및 민생안정,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F는 한국과 대만을 인공지능(AI) 하드웨어 핵심 교역국으로 지목하고, 원자재수출국 및 제조업거점국 등에 파급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세계경제 관련해서는 "여전히 중동 긴장·무역분절 등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지만 7월보다는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원자재 변동성과 물가압력, AI 생산성 기대 재평가 및 무역마찰 재확산 가능성 등 하방요인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metro



▲이 대통령 "중수청·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 헌법상 당연한 일...사건 처리는 관여 안 해" /사진 뉴시스
▲"국힘 397억 반환" 걸린尹 선거법 2심, 이달 27일 선고

▲강득구 "한동훈 딸 직접 수업 증빙자료 공개하라"...경찰 재수사 촉구
▲주진우, 李 대통령 황제골프 특검법 발의... "결제내역 공개하라"

▲尹 시절 대통령실 공사비 미지급...法 "국가가 업체에 5.8억 줘야"
▲법무부, 초대 공소청장 인선 착수...후보 추천위원장에 문무